

삼성·SK, 美정부에 반도체 자료 제출...“고객사 정보는 제외”

대부분 기밀 분류로 미공개
재고 등 민감한 내용 최소화
추가 정보 요구 가능성 남아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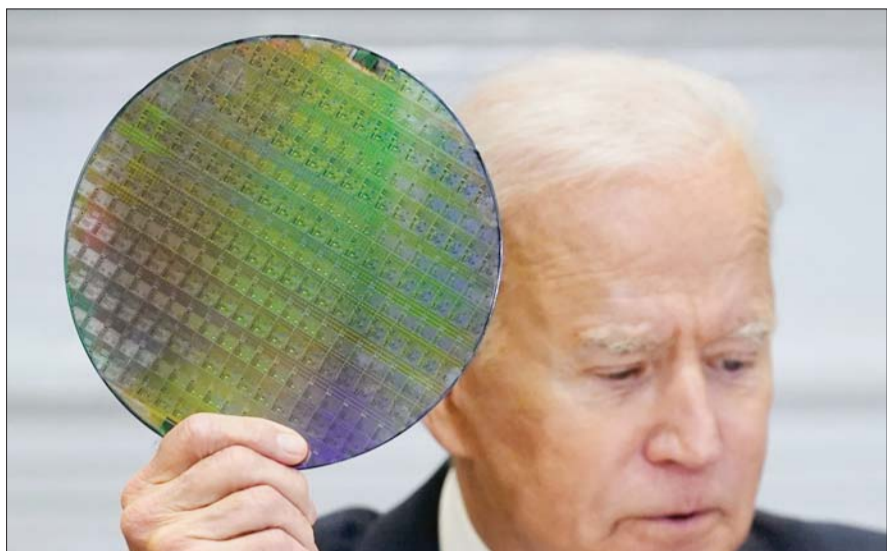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결국 미국 상무부에 자료를 넘겼다.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기밀 자료로 분류해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정부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기밀 유출 우려도 적지 않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일 자정(현지시간)이 지나기 전 미국 상무부에 주요 정보 제출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모든 자료를 기밀로, SK하이닉스는 일부만 공개로 하고 대부분을 기밀로 분류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밀로 제출한 자료에도 당초 우려됐던 민감한 내용을 최대한 삭제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가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품목별 로도 공급난이 심각한 상위 10개에 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고 있다.

해서만 제출하라고 양해했다. 다른 기업들이 내용을 최소화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를 참고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고객정보와 재고량 등 내용을 완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고객 정보를 완전히 빼고 재고 등도 산업군별로 분류해 약식으로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난

이 심각하지 않은 메모리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실제 제출한 자료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의 업체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대만 TSMC가 당초 제출을 거부했다가 마감을 앞두고 한발 먼저 자료를 넘겼다. 그 밖에 크고 작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체들도 공개 자료에는 공급처를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그동안 매출과 전



9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장관은 미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 양국간 통상 현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망 정도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기밀 사항을 최소화했다.

일단 반도체 업계가 민감한 정보를 최소화해 공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상무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기밀 자료에는 어느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사에 유출되면 치명적인 손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자료가 미흡하면 추후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언

급하면서 여전히 비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 워싱턴DE에서 러몬도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현지 협조와 양국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과 기관에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이는 중국과 미국 및 세계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보도시점 기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등 23개 기업이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 요청은 미국이 골칫거리인 중국을 겨냥해 내놓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업 자율성 존중받고 민감한 기밀 보호돼야” “내년 중 경제성장률 3%도 어려워”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개최

한·미·일 경제계 협의체 추진 제안
허 회장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최선”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감한 기밀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전경련) 회장은 9일 코로나 이후 무역 재건을 위해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모인 한국 측 참석자들이 미국 측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도약을 준비하며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번영을 위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번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한·미 간에도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민간 경제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통상협력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한국의 기업환경 저해 법률 이슈 등 산재된 이슈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통상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현안에 있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무역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이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 재선권 보호와 기술표준화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참석자들은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해당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 보호 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다만 미국 측은 내년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한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은 미국 대(對)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양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 무역·투자 제한 요소 개선의 필요성을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내년도 한미재계회의는 서울에서 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차이나 뉴스&리포트

부동산 거품 붕괴... 대체 산업 없어
“일련의 규제, 대가 치뤄야 할 것”

중국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4.9%도 ‘쇼크’로 인식됐음을 감안하면 2%대는 그야말로 공포다.

결국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 지난 십여년 이상 이어진 부동산 호황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치솟은 가격과 불어난 부채는 험다사태와 같이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IIF)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는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며, 연 5~6%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IIF는 부동산 업황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3% 또는 그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유지해야 할 연평균 성장률 5%보다 낮은 수치다. 중진국 함정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전후에 도달한 신흥국의 성장 탄력이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내놨다.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순부채비율, 단기 부채 대비 현금보유비율 등 3가지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입장

에서 보면 추가 자금조달 창구가 아예 막히는 셈이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던 험다그룹이 위기에 빠진 것도 이런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은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중국이 24%로 미국 15%를 크게 웃돈다.

홍콩 소시에티 제너럴 야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산업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다른 부문이나 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재정예고등이 커졌다. 현재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매에 따른 세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작년 토지 매매 수익은 1조 3000억달러로 지방 재정 수입의 84%에 달했다.

베이징대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GDP를 기꺼이 감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성장률을 얻기 위해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